

정 책 포 커 스

발행인 |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편집인 | 이은호(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발행일 | 2010년 12월 30일
편집위원장 |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편집위원 | 김병옥(충남대학교), 박수종(충청뉴스), 유병운(충남도청),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이준건(한국공공행정연구원),
정봉희(충남발전연구원), 최정진(한남대학교)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디자인·인쇄 | 필성인쇄사 042)252-1689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TEL : 041)840-1238~9
FAX : 041)840-1229
<http://www.pcpf.or.kr>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한 정책포커스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포럼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포럼에 있습니다.

정책포커스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Co-living/Conflict Mgt.-Issues & Alternatives



제5호 정책포커스

인사말

이 은 호(포럼 상임공동대표)
박 진 도(충남발전연구원장)

특집 : 충청남도 갈등 및 분쟁현안 해결방안

- 충청남도 갈등 및 분쟁현안 해결방안 연구 개요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I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II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III

제3회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개요 및 진행
- 우수논문

〈대학원생 부문〉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최우수상)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 정철주 외 4인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우수상)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경란 · 이나래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장려상)
공주대학교 대학원 김성록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장려상)
배재대학교 대학원 김태정

〈대학원생 부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최우수상)
단국대학교 박정수 · 박미소 외 3인



민·군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우수상)
성결대학교 김병석 외 2인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장려상)
충남대학교 정재영 외 4인

공공갈등관리의 유형과 지향점(장려상)
배재대학교 이왕찬 외 2인

2010년도 포럼 주요활동

주요언론동향

신간도서안내

충남포럼 임원 및 권역별 포럼 임원 현황

충청남도 및 시·군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현황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남 4대 권역별 포럼 안내

바람직한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이 은 호

최근 4대강사업, 세종시 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증폭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 신뢰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과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갈등표출은 상시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기 쉽고, 통상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더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학습의 기회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최선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적 비용이 증대되고 자주 주민이 문제의 해결현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우리사회 널리 강조되면서 民·官·産·學·研·言간의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되거나 특정 정책의 이해관계에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를 보다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만들고, 상호 의사소통의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갈등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균형있는 실천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회원 다수의 자발적 참여의 촉진과 함께 다자간 합의형성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충청남도가 더욱 생동감 있고, 알찬 '상생과 협력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정책포커스」에서는 충청남도 갈등·분쟁현안의 연구조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에 이어, 16개 시·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제정 및「충청남도~시·군간 상생협력현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노력들이 우리 충청남도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제도화된다면 갈등에 대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바람직한 소통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폭넓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한데 모아 이번에 “정책포커스” 제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주관운영기관인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발전의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 충남도와 16개 시·군이 지방자치행정을 알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하면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살아있는 지식을 창조하고 충남도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중요한 화두인 갈등예방과 화합을 통한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물론 다양성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자율성이 무시되고 역동성이 없는 죽은 사회가 될 공산이 큼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갈등이 있는 사회가 살아있는 모습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현상을 인정하면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대한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가느냐가 국가와 지역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협력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다자간 협의기구로서의 포럼운영은 상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발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제는 상생·협력·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방민주주의 발전에 크나 큰 질적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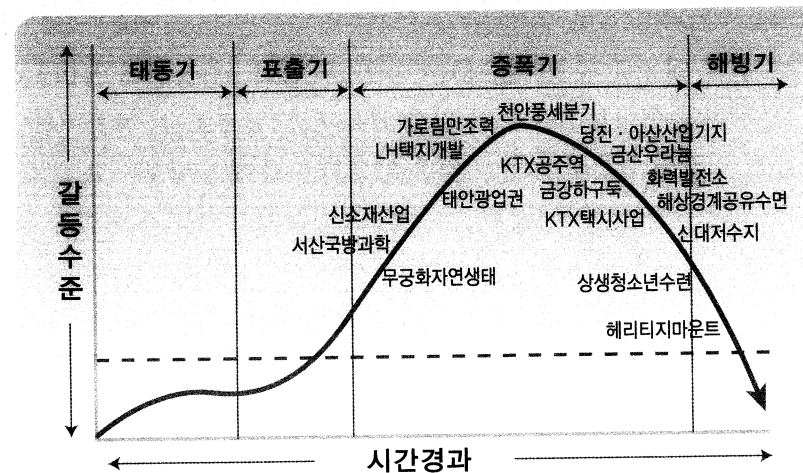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창립·운영되어 온「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충남의 갈등관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연구조사, 현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제도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상생협력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에 생산적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충남포럼’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이 ‘거울’이라면 ‘상생’은 ‘유리’입니다. 즉 ‘갈등’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과 같고, ‘상생’은 서로 마주보며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충남포럼’은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간 유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갈등해결의 성공·실패사례를 통한 현장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면, 우리 충남도는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남포럼’을 통해 충남도의 갈등예방과 상생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갈등·분쟁현안 해결방안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포럼」에서는 2010년도에 지역내 갈등 및 분쟁관련 현장조사를 통하여 총 18건(도 11건, 시·군 7건)의 갈등현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안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도출된 현안들의 갈등수준을 시간적 경과별로 구분하여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갈등·분쟁현안 갈등수준(총 18건)

편집자주

- 상기 그림은 갈등수준에 따라 태동기, 표출기, 증폭기, 해빙기로 구분하고 지역의 갈등 및 분쟁사안에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한 것으로 진입지점을 표기한 것이다.
- 지역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경우, 정책우선 순위 설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합리화를 위한 전제적 현장조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연구분석 결과 현재 충청남도내 갈등 및 분쟁들의 현안은 총 18건으로 충청남도내와 관련된 건은 11건, 시·군과 관련된 건은 7건이며, 대부분의 현안은 표출기를 거쳐 증폭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건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안은 점차 갈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I



충남북부권포럼 운영위원장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최한규 박사



본 포럼 기획·조정운영위원
호서대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전오진 박사

I. 서론

2009년 6월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하고 한해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은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갈등관리의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되며, 흔히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장기적인 갈등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더디게 하고 정부정책수행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지만 관리된 갈등은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갈등 자체는 좋은 효과 갈등과 나쁜 효과 갈등으로 구분된다. 특히나 공공갈등은 지역사회 생명력과 역동성의 증거며 좋은 효과 갈등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공공갈등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 사업,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주민 혹은 공공기관 상호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 혹은 분쟁을 말한다. 또한 갈등관리란 공공기관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갈등의 부정적 효과를 감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갈등에너지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의 수준은 태동기, 표출기, 증폭기, 해빙기의 4단계로 구분할 있으며 갈등관리 수준도 이에 대응하여 갈등예방, 갈등대비, 갈등관리, 갈등복구의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충남도의 현재적인 갈등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과 갈등유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갈등의 수준에 따라 갈등관리단계에서의 행동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갈등조사 사례

- ①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갈등은 2003년 10월경 천안지역택시업계가 고속철도역사에서 공동영업을 요구하기 위하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아산지역 택시업계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발생한 권한 갈등으로 사업구역 부분통합과 전체통합이 주된 쟁점이다.
- ②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분쟁은 지방정부간 물관리 관련 분쟁으로 환경보전과 이익갈등이다. 주요쟁점은 금강하구둑을 일부 절개하여 기수역을 복원,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개선, 홍수예방, 항구기능 회복 등 이점이 있다는 주장과 농공업용수확보 곤란, 효용가치 회의, 홍수 피해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즉 기수역복원의 효과가 쟁점의 핵심이다.
- ③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갈등은 주민과 기관간 갈등으로 지역개발관련 갈등이다. 갈등쟁점은 중앙정부(한국철도시설공사)와 주민간 성토공사와 교량건설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한 민관협의체 구성틀에서 이해와 설득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④ 예산신소재산업단지갈등 사례는 혐오시설입지와 관련한 지자체와 반대주민간의 갈등으로 반대주민은 환경오염 및 건강 그리고 농업피해를 호소하며 공단입지를 반대하고 있다. 갈등쟁점은 신소재산업인가 주물단지인지, 친환경시설설치여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여부 등이다. 산업단지조성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마다 주민참여의 보장 및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이행과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 ⑤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은 LH공사와 국토부가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해제(2단계의 70%)로 오랫동안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발생하는 지역개발행위와 관련 갈등이며, 주민과 정부간 갈등이다.
- ⑥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관련 갈등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갈등으로 지역개발과 관련이다. 이해당사자의 갈등쟁점이 역동성이 부족하여 단기에 해결가능한 갈등 사안이었다.
- ⑦ 천안풍세분기송전선로 설치 갈등은 비선호시설설치와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전원개발

사업)와 주민간의 이해갈등이다. 주요 쟁점은 송전선로 경과지와 설치방법(철탑설치, 지중화)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은 노선변경 혹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지라는 입장이 맞선다.

- ⑧ 청양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독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조급히 강행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⑨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은 지속적으로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지역주민들이 마을 일부가 또다시 수용되자 잔여지역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지역개발과 관련된 갈등이다. 갈등 쟁점은 지속적인 피해감수인정여부, 계획토지 수용과 잔여토지 수용 여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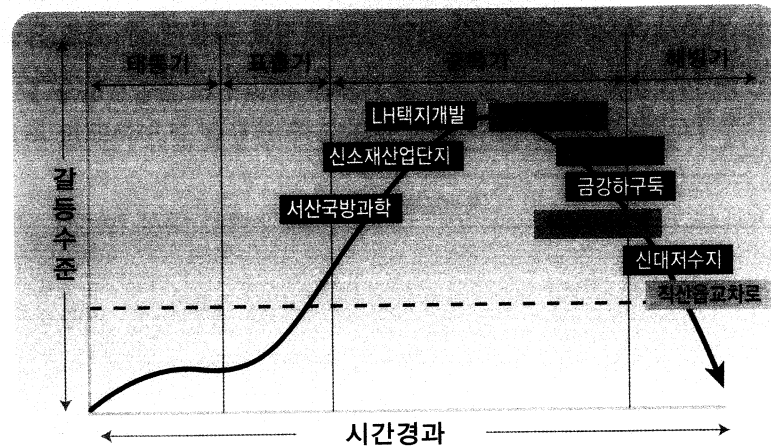
〈표-1〉갈등사례 유형

갈등사례	당사자	유형	갈등수준	이해당사자	해결방안
KTX천안·아산역택시사업구역갈등	천안시↔아산시	도로교통	증폭기	국토부 충남도	법개정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관련	서천군↔군산시	물관리	증폭기	농림부, 국토부, 충남도, 전북도	정책결정 (기관협의)
호남고속철공주역사 설치 관련	철도공사↔주민	도로교통	증폭기	국토부, 충청도, 공주시	협의중재 (철도공사)
예산신소재산업단지조성관련	예산군↔주민	지역개발	증폭기	충남도, 당진군	이해설득 (주민)
LH공사택지개발사업축소관련	LH공사↔주민	지역개발	증폭기	국토부, 충청도, 아산시	기관협의 (국토부)
천안직산읍국도1호선교차로설치	국토관리청↔주민	도로교통	해빙기	천안시	기관협의 (국토관리청)
청양신대저수지축조관련	농어촌공사↔주민	물관리	해빙기	청양군	이해설득 (주민)
천안풍세분기송전선로설치	한전↔주민	비선호	증폭기	지경부, 충청도, 천안시	이해설득
서산국방과학연구소증설관련	국방과학연↔주민	지역개발	표출기	서산시, 국방부	이해설득

III. 갈등수준과 갈등관리단계

공공갈등에서 있어서 갈등수준은 첫째, 갈등태동기는 잠재적 갈등으로 갈등조건이 존재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예상되는 갈등에 사전적으로 갈등예방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표출기는 잠재적 갈등에서 현재적 갈등으로 표면화 되는 단계로 갈등대비 전략이 요구된다. 예상되는

갈등에 사전적인 대기활동이 요구된다. 셋째는 갈등증폭기로 현재적 갈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증폭되는 단계로 갈등관리 대응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갈등쟁점 및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요구된다. 넷째는 갈등해빙기로 현재적 갈등 쟁점들이 조정되거나 합의되어 소멸되는 단계이나 갈등으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후유증 치료가 요구되는 단계로 갈등관리의 회복단계에 해당한다. 이단계의 갈등관리는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신뢰회복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그림1> 시간경과에 따라 갈등수준의 변화와 충남도의 9개 사례를 대응시켜본 것이다.



〈그림1〉 갈등 수준

IV. 결론

여기에서 소개한 충남도의 주요 갈등사례는 현재적 갈등으로 갈등사례 자체가 종결되거나 완결된 것이 아니어서 갈등태동기부터 해빙기까지 전반에 걸친 조망은 불가능하였고, 이해당사자들이 느끼는 갈등종결에 대한 수용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적 갈등에 대한 쟁점인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특히 갈등현장 조사자들이 행정기관이나 언론보도 자료에서 탐색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이해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의 역동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해당사자와의 인터뷰과정에서 느낀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시대의 DAD(결정하고, 알리고, 방어하는) 방식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사회적 불신으로 전이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주민간 불신뢰와 행정 불신되는 공동체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장 조사 II



본 포럼 갈등중재·조정 전문위원장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 이준건 박사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공사

1. 개요

2008년12월8일 원불교재단 무궁화공원 랜드가 충청남도에 공원묘원 조성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들이 비선호시설(공원묘원)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무궁화공원 랜드는 이곳에 89만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이중 일부 9만여평 규모의 장묘시설인 납골당과 평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결국 화장장 및 생장(매장)시설일 들어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이해당사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다. 충청남도는 2011년 5월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양측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성격(특성) 및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

지역주민들은 사업 반대를 위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면담을 비롯해 논산시장, 논산의회를 각각 방문하여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였으며 광산 김씨 문경공파 문중은 논산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이어 벌곡 양산리 한삼천리 주민 200명도 원불교 공동묘지설치 반대 집회를 벌였다. 또 벌곡면 주민으로 구성된 300여명

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여는 사업추진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농민연합회 논산지부가 주민들의 편에 가세하면서 갈등은 증폭되어가고 있다.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관계가 전국농민연합회 논산지부가 개입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10명으로 구성된 벌곡발전협의회가 조정에 나섰으나 주민들로부터 사업자 측의 매수에 의해서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대화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불신만 증폭시켰다.

인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 및 석산(골재)개발 사업장이 10여년 전부터 가동 중이어서 분진과 소음 환경 등으로 주민들이 비선호시설로 인한 고통을 수차례에 걸쳐 호소한 바가 있다. 주민들은 당시 이와 같은 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정보 및 화장장 시설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 해법찾기 및 해결방안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갈등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논산시, 지역주민, 사업자 등 다자가 참여하는 좌담회 및 토론회가 시급하다. 상호 대화를 위한 협의체 또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설명회 개최 성격과 규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논산시가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비슷한 시설의 운영 및 갈등해결방안 자원배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득실을 따져보고 최신택 시설을 할 경우 비선호시설에 대한 고정되어 있는 선입견을 바꾸어주는 등의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가하락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지역주민 우선고용, 일부 부대사업운영권 부여, 주민복합시설 및 생약연구소와 같은 편비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지역발전기금의 규모와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후 화장장 및 생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서약 또는 공증 등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논산시가 벌곡지역의 현안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의 이미지 추락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더불어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시설이라는 인식 전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II.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1. 개 요

(주)토자이홀딩스가 2009년 3월 충청남도에 우라늄광산개발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등의 유해물질로 인한 하천오염 및 건강권 등의 각종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광산개발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첫째,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폐석 및 광물찌꺼기발생 둘째, 강내 충전은 폐기물 관리법저촉 셋째, 대다수 지역주민 및 인근대학 사찰 등에서 집단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사업허가를 불허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상류에서 하류지역으로 이어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와 동구의회 중구의회 대덕구의회 옥천의회와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할 것을 결의한데 이어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성격(특성) 및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

(주)토자이홀딩스는 충청남도의 사업인가 불허결정에 반발하며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원신청을 내는 등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대립각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8년도 인근 지역에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대거 나와 공사를 중지하였는데 아직도 당시 발생했던 유해성분이 노변에 남아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이지역의 농특산물인 인삼과 추부 깻잎 등이 전체 지역경제에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산을 개발할 경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3. 해법찾기 및 해결방안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사업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등 언론을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우라늄이 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수한 광물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이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

은 우리농광산 개발도중 경제성이 떨어져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개발하다 중단된 유해물질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높아 토자이홀딩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과거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결정 모델과 같이 국가가 직접 주민을 설득하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물론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동구의회, 중구의회, 대덕구의회, 옥천군의회 등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범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II.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나이스골프장건설사업)

1. 개 요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과정인 임목축적 조사시 주민들은 기준보다 높은 산림환경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골프장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면서 강력 반발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내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2008년 4월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논산 나이스골프건설사업자 부도가 발생하면서 2009년 3월 (주)더블유엠건설사가 인수하였으나 부도 공백기간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복구비 미예치 등으로 논산시로 부터 청문조사를 받은 등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다.

2. 성격(특성) 및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전국농민연합회 논산지부가 개입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자간으로 확대되었다.

상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으로 노정되면서 현재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2011년 최종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있으나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항소심으로 이어져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사업자는 공사강행으로 또 다른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골프장내 남아 있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불사할 움직임이어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3. 갈등해법찾기 및 해결방안

법적 분쟁을 통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회복을 위하여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

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수질환경문제, 토지 보상문제 등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충남포럼(남부권포럼)등과 연계한 공동체회복에 힘써야 하며, 상호합의에 의한 실행을 통하여 상생방안을 준비, 법원 판결 후 갈등재현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V. 상생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1. 개 요

증산도유지재단에서 청소년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 우려하면서 갈등이 발생되었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대규모 시설들이 건립되어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 피해를 보았다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2. 성격(특성) 및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

계룡산 신원사 인근 지역으로 각종 종교시설이 대거 건립되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이 종교시설에 대한 원천적인 경계를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 등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특용작물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과거 유사한 시설이 들어와 지하수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은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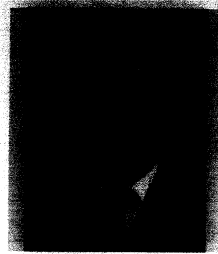
특히 각종 청소년시설 등이 들어선 후 지역주민들조차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등 공동체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감을 갖는 등 비선호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3. 갈등해법찾기 및 해결방안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논산시에 약속을 들어주기로 대부분 합의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고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상생청소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로 주민이 우려하는 특정 종교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에 힘써야 하며 준공 후 시설 개방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과 허가받은 지하수개발 수량에 철저한 이행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장 조사 Ⅲ



충남서해안권포럼 운영위원장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신 기 원 교수

I. 서 론

우리사회가 점차 산업화, 민주화, 복잡화현상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내 갈등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에서는 주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관과 민간의 갈등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관과 민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관과 관간의 갈등(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등), 민과 민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갈등의 내용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전통적인 범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행정관할구역분쟁, 환경오염피해를 둘러싼 갈등,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충남 서해안권(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에서 발생한 5가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갈등개요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II. 5가지 사례의 개요

먼저 해상 경계 및 공유수면매립지 관할분쟁(갈등 1)은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협의로는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행정관할구역 분쟁이지만 광의로는 충청남도과 경기도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쟁은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결에 의해 기존의 해상도계를 인정하고 당진군의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에 대하여 당진군의 자치권을 인정하

여 일단락되는듯하였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표출되었다. 즉 평택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당진군이 신규매립지를 일방적으로 등록하여 문제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당진군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상도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관할구역안의 신규매립지는 당연히 당진군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진-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갈등(갈등 2)은 해당 사업의 수정된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역주민간에 발생한 민민간 갈등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컸고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외된데 따른 불만이 동시에 분출되었다.

셋째, 동부건설의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갈등 3)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 대 당진군 및 당진군의회, 반대투쟁위원회 등이 대립하면서 1차적 갈등이 제기되었다. 그 후 동부건설과 발전소 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다시 갈등이 나타나는 등 민관간 갈등 및 민민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다.

넷째, 태안 광업권출원관련 갈등(갈등 4)은 광업권자가 안면도 등 4개 지적에 광업권을 출원하면서 해당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야기된 민민간 갈등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20년 전에도 광업권출원으로 송사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보니 물질적·정신적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광업권출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단위 집단소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다섯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갈등 5)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서부발전과 이를 찬성하는 서산·태안주민들이 한 축을 형성하고 반대하는 서산시 및 서산·태안주민들이 또 다른 한축을 형성하여 대립된 양상을 보이는 복잡한 갈등으로 민민간 및 민관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특 성

이상의 갈등에서 나타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갈등문제의 해결에 대한 키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갈등1의 경우 현

재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갈등2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갈등3과 갈등5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하며, 갈등4도 등록사업사무소에서 실지조사를 통해서 허가 및 불허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둘째,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갈등3과 갈등5의 경우처럼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환경문제나 보상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졌으며 환경단체 등의 반대논리도 명확하고 반대운동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추진하는 측에서는 용역 등을 동원하여 찬성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갈등을 중재해 줄 메커니즘이 별반 없었다. 앞에서 제시한 5가지 갈등 중 갈등1만 정부기관의 최종 분쟁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 나머지 4가지는 진행 중이다. 갈등4도 불허로 결정되면 분쟁은 종식되지만 허가로 결정될 경우 갈등이 강력하게 야기될 개연성이 있는데 나머지 3가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를 막거나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넷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아쉽다. 갈등2와 갈등5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지나치게 사업자위주로 작성되다보니 주민들의 불신이 크고 반발도 강하게 나타났다. 갈등3과 갈등4의 경우에도 사업허가가 나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갈등이 재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갈등당사자간에 상생협력하려는 모습이 약했다. 갈등1의 경우에도 당진군과 평택시가 한때는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맺는 등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현재 이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갈등3과 갈등5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고 합의를 도모하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강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갈등1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갈등이 나타났고, 갈등3과 갈등5의 경우에는 민·관간 갈등과 민·민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갈등2와 갈등4의 경우에는 민·민간 갈등이 나타나는 등 여러 양상의 갈등이 나타나 해결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V. 제언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갈등현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해결과 관련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느덧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국책사업과 관련된 경우 공모제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반대경험을 거울삼아 공모제로 하고 있는 바 전력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권한을 갖는 갈등해결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각 분야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각자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고 갈등당사자들의 의식수준과 정보수집능력 및 분석능력이 높아지다 보니 웬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갈등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에 대해 중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현안이 내포된 사업의 경우 사전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경관련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이다. 그동안 야기된 각종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분열, 비합리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식 등이 가져온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넷째,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고 미비된 법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4와 관련하여 광업법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당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개정하여야 하며, 갈등1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에서 해상도계 인정 및 신규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갈등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때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갈등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모여서 연구하고 학습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충남지역의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소속위원들이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사례관리를 토대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Excellent Articles

제3회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 충남포럼에서는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게 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해 매년 1회에 걸쳐 논문대회를 개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는 200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회(2009년), 그리고 2010년에는 제3회를 개최

■ 대학원생부문에서 백석대 정철주 외 4명(지역대학과 지역발전에 연계성에 관한 연구)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단국대 김경란·이나래(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가 우수상(충남발전연구원상), 배재대 김태정(충청남도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공주대 김성록(해외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이 장려상(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

■ 대학생부문에서는 단국대 박정수 외 4명(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성결대 김병석 외 2명(민·군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이 우수상(충남발전연구원상), 배재대 이왕찬 외 2명(공공갈등관리의 유형과 지향점에 관한 연구), 충남대 정재영 외 4명(창조도시를 위한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이 장려상(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

■ 논문대회는 충남포럼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주관하며,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사회통합, 갈등해소, 상생·협력·공존공영 등 충청남도과 관련된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정책문제로 이론과 현실을 연계 및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이면, 전국 대학(원)생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별로 응모 가능하며, 갈등해소 전문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작)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 정철주 외 4인

요약문

세계적인 철학자 앨빈 토플러는『권력의 이동』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3가지 원천이 있다고 하였다. 즉 원천은 폭력(暴力)·부(富)·지식(知識)이다. 그에 의하면 폭력은 저품질 권력, 부는 중품질 권력, 지식을 고품질 권력으로 정의하였다. 21세기 전 세계적 권력투쟁의 핵심은 지식의 장악이며, 지식은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하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지식을 보유, 획득, 개발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84%로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또한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에 통해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대신 삶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이 강조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가 약 30년 만에 부활하였고, 1995년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산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지역사회는 더 이상 중앙에 종속되기 보다는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

대를 맞이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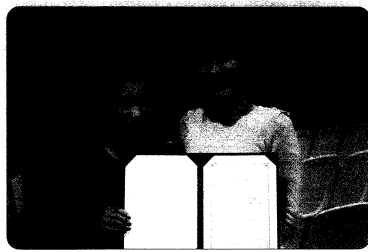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 지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의 가능성과 지리적·시간적 제약성 등을 감안하여 백석대학교를 연구범위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이후 통계조사를 통한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의존적 기능을 고찰하여, 지역발전에 대학의 기여를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연구에 앞서 천안시의 대학 현황을 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백석대학교가 천안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학생을 중심으로 조사 및 통계를 수행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학의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기여 정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역문화·경제·지역개발·교통 확대 등의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유출억제·산학협동·주민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대학이 설립됨으로써 인적자본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교육기회 확대로 인하여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된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가진 각종 시설이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지역격차의 확대와 지역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보조 자문역할, 상징적 역할, 교육적 역할 등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선도적 역할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산·학간 인적자원의 이동 활성화를 통해 고급인력과 운영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의 보고인 대학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했던 지식과 기술지도 위주의 역할이나, 대학설립으로 인한 인구유입·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심층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여론을 주도하며 지역사회를 감시·통제하는 역할까지 대학의 발전방향은 무궁무진하다. 이를 위하여 향후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때이다.

ㄹ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ㄹ

-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 우수상(충남발전연구원장상 수상작)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 경 란, 이 나 래 }

요약문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과연 선의의 경쟁인가?” 1995년 6월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실시후 한국사회에서는 관-관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힘겨루기로 인한 제한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민-민, 관-민, 관-관 분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분쟁(관-관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분쟁의 발생원인과 발전과정, 결론도출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분쟁해결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상호이익 창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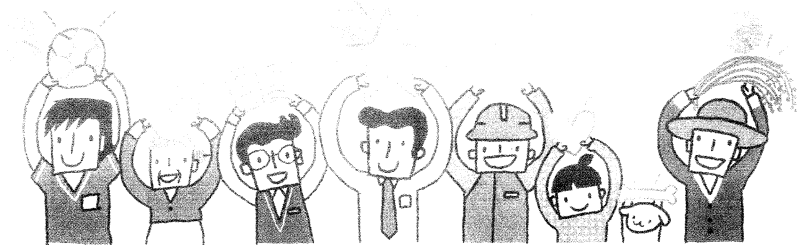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지속기간은 약 4년

6개월로 측정되었으며, 시간적·물리적 비용은 수치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난 후에도 이에 불복하여 평택 시민들이 쫓겨대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여파가 한 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에서는 분쟁의 두 당



사자인 당진군과 평택시가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적인 자세를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택함으로써 오랫동안 힘겨루기가 지속되었다.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지역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욕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분쟁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의 인식전환을 통한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간에 소통이 부재한 상태이며, 협조적 자세를 통한 갈등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시키고, 지역사회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하면서 유연한 갈등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ㄱ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ㄴ

-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 장려상(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상 수상작)
공주대학교 대학원 김 성 록 }

요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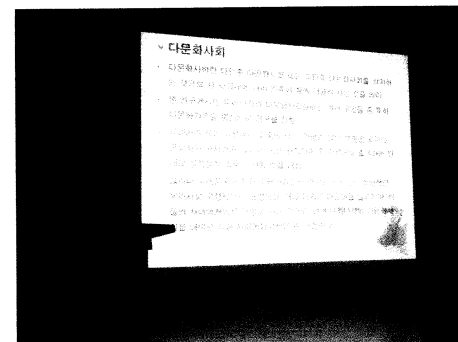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90년 약 5만명에 불과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0년 현재 약 120만명에 달하며, 이는 총인구 대비 2.3%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수준은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국제결혼'으로, 2009년 현재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0.8%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자는 개별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편입이 되는 것으로써 사회의 기초토대인 가족 자체가 다문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인원으로 정착하며

그 자녀들 또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나며 성장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의식이 매우 강하므로 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과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며, 이는 결혼이민자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결국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다문화가족 전체로 확장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력 증진과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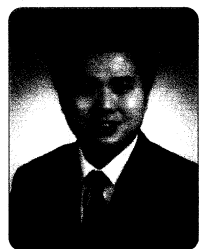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NGO까지 너무나 많은 기관과 단체가 각각의 판단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진행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달체계가 분산되고 그 격차가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관련법안의 통합 및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구 및 행정 서비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시민사회 영역이 튼튼하게 존재하며 다양한 소수민족의 유입을 경험한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외국문화의 유입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시대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정책은 우선 인식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회에서 함께 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Ⅴ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 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 Ⅵ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 장려상(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상 수상작)
배재대학교 대학원 김 태 정 }

요약문

정부불신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의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하드웨어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및 기능이양,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하며, 소프트웨어 부문의 조치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갈등관리, 관계관리, 비전과 정보공유, 주민과의 소통 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의 파트너십 형성 및 증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방정부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협치 역량의 증대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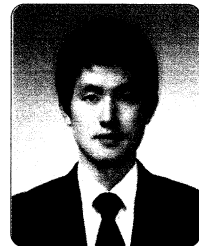
현대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어떤 부문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조직과 부문들이 그 경계를 가로질러 협력해야 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충청남도는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증대와 행정의 민주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한편 민간은 충청남도와의 협력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접근성과 조직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충청남도 민·관 파트너십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관 파트너십은 지방정부가 민간에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충청남도에 종속되기 쉬운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며,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충청남도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주체가 각각 자립적이고,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되며, 공통의 목적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쪽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근본적으로 충청남도와 민간 사이에 우열이 없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또한 민관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서로의 영역과 기능을 분담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관의 협치를 통한 충남도정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지역사회의 파트너십과 안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지역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고려하면서 충청남도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 지역주민, 지역 NGO등이 파트너십의 기초가 되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국가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주민들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파트너십은 지방정부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협치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ㄴ

- 충청남도 천안시를 중심으로 -



{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작)
단국대학교 박 정 수, 박 미 소 외 3인 }

요약문

I. 서론

지방화와 더불어 또 다른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정보화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도 점점 향상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행정과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충남 천안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 건수가 1년에 10건도 넘지 않고 채택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보화시대 속에서 천안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시민참여와 전자정부

전통적으로 시민참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와 같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참여'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시민참여를 정치참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대의정치 구도의 위기와 시민들의 의식구조 변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 요구, 시민지향적인 정부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을 위해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행정 및 정책과정에 활용하여 내부적으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고객들에게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응성을 높이며, 나아가 행정 및 정책과정의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정부에서의 온라인시민참여는 정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부터 정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참여까지 모두 포함한다.

시민제안제도는 지역 발전 또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서면 또는 방문 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행정관청에 제안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개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제도로, 시민의견을 시의 적절한 공공서비스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민참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사례	해외사례
서울특별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안산시 '반딧불이 제안세상' 대구광역시 '상상제작소'	영국의 '시민공간' 싱가포르 'e-citizen'

III. 실증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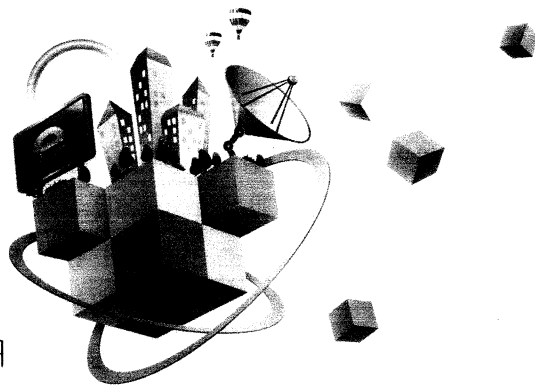
천안시민들의 천안시 홈페이지 사용현황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천안시민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시민들 대다수가 시민제안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시민들 중 다수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서면제출보다 더 자유롭게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가장 큰 이유로 시민들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이 서면·방문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였으며,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가 천안시 시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체응답자 85.4%가 활성화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중 시민제안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0명(3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안의 실질적인 채택이 32명(24.6%), 홈페이지개선이 25명(19.2%), 채택된 대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20명(15.4%),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제안제도의 교육 13명(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의 문제점

의식·제도적 측면	홍보부족
	전문적인 담당부서의 부재
	실질적인 채택 가능성·제안의 유인성 희박
홈페이지(수단적) 측면	메뉴구성 불편
	피드백 부족



IV.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천안시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조사하고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내 주요메뉴와 '국민(정책)제안방'의 게시물건수를 비교한 결과 다른 메뉴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

1. 의식·제도적 측면

첫째,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① 대중교통·지역신문을 이용한 홍보 ② 홈페이지 광고를 통한 홍보 ③ 지역행사를 통한 홍보 ④ 시민제안제도 공모전 등이 있다.

둘째, 제안의 방법, 제출경로, 제안서의 작성방법, 창안으로 채택된 경우의 사례, 창안의 효과, 보상의 내용, 제안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영역의 제시 등의 상세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으로 제안을 수렴을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상 및 상여금을 증액하는 방안 외에도 '자랑스러운 주민상', 채택자에게 자신의 정책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등 창안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수단적 측면

첫째, 천안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은 많은 연결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고 비슷한 이름의 메뉴가 많아 정책제안방을 찾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메뉴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식별하기 쉽게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제안제도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정할 수 있게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민 · 군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전투비행장 소음사례를 중심으로 -

{ 우수상(충남발전연구원장상 수상작)
성결대학교 김 병 석 외 2인 }

요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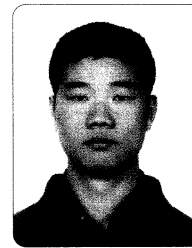
그 동안 공군은 군용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 비행과 공휴일 비행을 조정 및 규제하고, 훈련시간을 축소하는 한편, 비행경로와 비행 고도를 조정 하는 소음 경감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민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무료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군의 소음 대책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작전태세 유지와 훈련 시 안전을 확보하며 주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민 · 관 · 군이 서로 상생협력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H. Stein, 핫도리 미노루의 민군관계에 대한 정의, S. P. Huntington, M. Janowitz의 민 · 군 갈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보장형 갈등, 보상형 갈등, 보답형 갈등, 시정형 갈등으로 민 · 군 갈등의 유형을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민군관계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갈등사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민·군 갈등의 대표적인 갈등사례 중 하나인 서산비행장 사례를 선정하였다. 충청남도 서산 해미읍 비행장은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며, 이로 인한 정책 및 소송 과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며 다른 군용 비행장과 다르게 먼저 마을이 들어선 후 비행장이 들어선 양상을 보여 해미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먼저 각 상황을 갈등단계별로 형성기, 심화기, 지속기로 나누어 각 단계별 내에서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의 개념과 서산 해미 지역의 비행장 소음 피해 수준을 알아보고, 실질적 피해사례와 소송, 갈등 흐름을 파악하여 각 단계별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서산 해미 군 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신뢰회복, 군 입찰 공고 지역제 재정립 대법원 판결과 입법안은 통일, 군사시설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대책 수립 근거가 될 법률의 제정, 국내외 민군갈등 효과적인 갈등 해결사례의 벤치마킹과 같은 갈등관리 전략 방안을 모색 하였다.

『 공공갈등관리의 유형과 지향점 』

- 국내 공공부문 갈등을 중심으로 -



{ 장려상(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상 수상작)
배재대학교 이 왕 찬 외 2인 }

요약문

1. 서론

한국은 민주화를 통해 정치 ·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민주화 이후 억눌렸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한국 사회는 분쟁과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치 ·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며 전개된 많은 분쟁과 갈등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고, 잠재적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토론, 대화, 관용이라는 민주적 절차에서 중시하는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했기에 분쟁과 갈등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강조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에서도 그 수행과정 중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갈등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공공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 사업주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최근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 시민의식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대응 방식이 성숙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의 개념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갈등과 갈등관리의 개념

갈등 해결을 위한 관점과 분쟁의 경우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된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갈등의 개념을 정립할 때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갈등과 분쟁의 관계이다. 갈등은 무제한적으로 순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집단이나 개인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은 흔히 내재된 갈등이라고 하며, 분쟁은 표출된 갈등이 된다. 따라서 갈등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태인 반면, 분쟁은 갈등의 결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행위, 과정 등이 된다. 갈등관리는 갈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갈등관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의 어떤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2. 갈등의 기능

갈등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자의 견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을 병적인 상태로 보고 그 원인과 처방을 연구하는 갈등의 역기능적 시각과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갈등과 관련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상태를 연구하는 순기능적 시각도 공존한다.

3. 갈등관리의 유형

갈등관리를 갈등해결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두 가지 개념은 다소 상이다. 갈등해결이란 갈등을 역기능적,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갈등관리란 갈등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대단히 기능적이고 유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4. 공공부문에서의 갈등의 개념 및 특성

공공사업 갈등이란 정부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 사업시행, 법규제정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을 말한다. 이는 이해당사자가 불확정적이고 시민사회 전체가 잠재적 이해당사자라는 특징이 있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다른 분야의 갈등과는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갈등원인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은 갈등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II. 국내 공공부문 갈등사례 실태

본 연구에서 선택된 공공분쟁은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둘 이상의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정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분쟁관리기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쟁”으로 한정했다.

IV. 결 론

현대 조직체내에서는 표면화되든 잠재되어 있든 수많은 상호작용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이 발생하는 조직을 유해한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갈등상황이 어떻게든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인정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갈등관리방안도 갈등조정보다는 갈등해소가 더 유용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 유성구 공동의 민·관·학 협력을 중심으로 -

{ 장려상(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상 수상작)
충남대학교 정재영 외 4인 }

요약문

최근 전국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문화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과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인재 발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나 민·관·학의 협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창조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전이 진정한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창조적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양성하고 정착시킬 새로운 문화지구를 형성해야한다. 기존의 문화의 거리인 은행동이나 신도심은 문화생산보다는 소비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창조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새로운 문화거리로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거리 및 문화지구의 사례를 통해 비교하여 공동이 대전의 대표적인 창조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한 문화지구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는 공공문화 지원정책과 공공디자인, 구성원들의 인식, 인적자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종속변수로 공동의 문화환경을 설정했다. 이후 국내의 문화거리 주요사례로 인사동과 홍대를 보았고 거리사업을 통해 새로이 거듭난 광진구 노유거리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대표 문화거리를 살펴보았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거리 사례로 꼽히는 도쿄 마루노우치 나가토오리의 시사점을 통해 공동 문화거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설문과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기준삼아 공동의 현

실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공동을 방문한 타 지역 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공동의 장소중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디있을까?, 자랑할 만한 곳이 어디있을까?” 하고 물으면 선뜻 생각나는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현재의 공동은 획일적이고, 무개성한 지역이다.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나가토오리 활성화 사업의 사례는 주인의식을 가진 주민조직과 이들을 주인(client)과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 지원한 공공에 의해 추진된 사업은 지역 환경의 질적 개선은 물론, 지역 전체의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의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다시 공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의 문화거리조성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지역의 핵심인재가 될 창조인재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및 규정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소비자), 전문가, 지자체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물리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국적과 환경,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여 도시의 다양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개방성과 관용성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개선의지가 있으며 또한 민·관·학의 협력과 관심이 있어야만 공동은 창조거리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창조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도 포럼 주요활동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

- ◎ 포럼은 2월 2일 화요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함.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 및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발견, 탐색해 보고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잠복되거나 또는 현재화된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개최



금강살리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포럼은 2월 9일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갈등전문가들이 직접 금강살리기 사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와 부여, 논산, 서천 등 지역의 농민과 각급기관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을 만나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

◎ 현장답사 및 실무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 지역의 주민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갈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관·학·연·언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본 포럼 임원 및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갈등예방 및 해결 역량 향상을 도모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개최

- ◎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를 3월 3일 개최하고 4대강사업 홍보물 방영, 「금강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
- ◎ 「금강살리기 사업」의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계, 구체화하고 범도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합의형성 및 자문활동의 활성화하여 충남포럼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지원체제 강화 필요하며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며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개최



-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4월 16일 2010년도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 및 중앙정부 갈등관리 법률 제정 추진을 위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 및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갈등관리 기본법제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금년내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16개 시군 대상으로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

- ◎ 각계 각 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제안 설명과 토론을 통해 갈등에

방·해결을 통한 법률안 제도화 추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 전문적인 좋은 고견과 유익한 토론 내용들이 제안되었고,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정책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서둘러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 간 2010년도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 2010년도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은 4월 27일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갈등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모니터링 운영방안, 갈등순회매니저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방안,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간의 2010년도 운영계획 및 2011년도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업무 협력 강화

갈등관리 조례 제정 및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대외협력활동 추진

-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갈등조정사' 등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 주제 발표
 - 2010. 4. 23~24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병학 충남포럼운영위원장은 "행정학과 실용성"이란 학술대회 주제에 부응하여 전환기 행정학분야의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함.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취업난과 행정학과 미래에 대해 가칭 '갈등조정사', '재난관리사', '인적자원관리사' 등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블루오션 영역을 만들어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전문가 영역 확대를 제안

- ◎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주제발표
 -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제18회 국정포럼(2010. 5. 6)에서 최병학 운영위원장은「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발표. 국가 지자체등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권위 갖춘 기관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칭) '갈등조정사' 전문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
- ◎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주제발표
 - 6월 23일(수)~24(목) 부산 해운대 팔레드 시즈 콘도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이 후원한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에서 본 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최병학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현황(충남포럼)과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사례"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전문가(갈등조정사)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
- ◎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관련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참여
 - 충남 포럼 운영위원장은 2010년도 6월 25일~26일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인 "융합학문으로서의 행정학" 행사에 참석하여,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행정학 신규 자격증 제도의 도입방안 : 추진정과 과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실무협의회 개최

- ◎ 2010년 9월 6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하반기 운영계획 협의,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논의

-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사업을 확대하고 4대 권역별 포럼과의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사업을 동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시·군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시·군의 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4대 권역별포럼을 활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충청남도 민·관·군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 ◎ 포럼은 9월 16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국방연구소 회의실에서 2010년도 민·관·군간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홍보 및 민·관·군간 대외협력 방안 등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실무협의회 개최



- ◎ 갈등관리의 개념구조와 함께 민·관·군 관계에서 민·관·군 협력으로의 전환논리를 통해 민·관·군간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최근 주요 갈등현안에 대한 진단·논의를 거쳐 앞으로 요구되는 민·관·군 간에 바람직한 갈등예방 및 관리 방안을 모색, 제안을 위한 민·관·군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 실무협의회를 개최

「금강사업」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개최

- ◎ 2010년 10월 27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금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실태와 관련하여 향후 효율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는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요활동

동시에 갈등예방관리와 다양한 참여자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 ◎ 4대강(금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물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금강사업의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세미나 개최



- ◎ 포럼은 11월 16일 2010년도 민·관·군간의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군 간의 화합·협력,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구축,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민·관·군 관계관 및 이해당사자들 대상으로 공동학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충청남도 종합적 갈등관리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 민·관·군 협력을 위한 갈등예방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논의된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토론 및 발표내용이 각 기관에서 유용하고 적절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 강조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연수 개최

◎ 충남포럼은 11월 18일 충청남도 및 각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와 충남포럼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경주시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공동워크숍과 현장방문 교육연수로 실질적 갈등관리 역량 배양하고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의 해소방향을 모색

◎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란의 요소를 제거하고 진솔한 상황 설명으로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되며, 방폐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폐장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갖는 의혹을 공유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명,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공기연장이나 사고 발생시 안전성을 알리는 지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충남포럼에서는 12월 14일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

◎ 응모논문은 12월 1일(수)부터 6일(월)까지 최종적으로 충남포럼 사무국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함, 접수된 논문은 12월 9일(목)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심사과정을 거쳐 총 8편을 선정·발표



◎ 선별된 논문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공주시에 소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논문발표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발표 후 2차심사를 통하여 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을 나누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 등 총 8팀이 수상

◎ 대학원생 부문에서·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에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을 연구한 정철주 외 4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학생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를 중심으로·를 연구한 단국대학교 박정수 외 4명이 최우수상을 차지함

◎ 대학원생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상 1팀에게는 행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에게는 충남발전연구원상과 상금 50만원이, 장려상 2팀에게는 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상과 상금 30만원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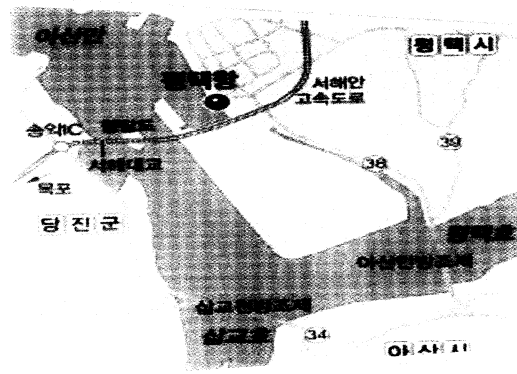
◎ 이번 논문대회를 준비한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는 이번 논문 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원)생들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 관심을 갖고 갈등해소를 위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주요 행정구역 분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충청남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뿐만 아니라, 주요 도정수행에 있어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충남포럼의 관계자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



Media Trends

주요 언론 동향

01 평택호 명칭 싸고 아산·평택시 충돌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가 중간에 놓인 '평택호'의 명칭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아산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은 '아산호 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 평택호의 명칭을 아산호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평택항의 명칭도 아산항으로 바뀌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산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평택호의 원래 명칭이 아산호였는데 90년대 이후 바뀌었다"며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1973년 아

산만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도 담수호의 명칭이 아산호였는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평택호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16년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1994년 4월25일 교통부 고시(제1994-25호)로 관광지 명칭이 아산호에서 평택호로 변경 고시됐고, 당시 관보에도 게재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서울신문](2010-02-11), 23면

02 농어촌공 풍력단지 밀어붙이기 논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산 천수만 방조제를 포함한 서해안지역 방조제(내 외측)주변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 단지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서해안지역 방조제를 육상 풍력발전단지로 지정, 에너지 컨버전스와 에너지 세이빙지구로 단지화 하겠다고 보고했



다. 이어 사업비 1조500억원이 투입되는 발전량 건설 계획을 세우고, 서산시 등 해당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와 MOU 체결 무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발전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포스코 건설, 두산중공업, 유니슨, 보아스 건설, 대항건설산업 등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방조제의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반대해도 밀고나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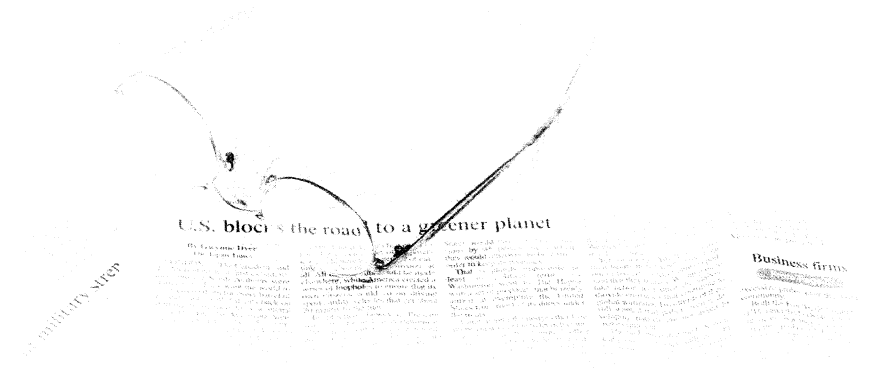
[중도일보](2010-03-25), 18면

03 4대강 사업 찬·반 대립 심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찬 반 양측이 19일 공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4대 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19일 오후 1시 공주시 웅진동 소재 곰 마루 금강보 공사현장에서 마곡사 원혜스님, 영평사 환성 스님 등을 비롯해 수도자, 신도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 생명 평화 미사'를 열었다. 같은 시각 공주시 금성동 소재 웅진탑 공원에서는 전국환경연합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금강물길 살리기 시민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대전사랑문화협회, 금강살리기운동 본부, 녹색 미래실천연합 등 40여 개의 대전·충청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 회원 800여 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도일보](2010-04-20)



04 민선 5기 한 달, 4대강사업 곳곳 '마찰'

4대강사업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마찰은 예고됐다. 야권 단체장들은 4대강사업 일부 공사 발주나 착공을 보류하거나 사업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다 최근 환경단체가 보 건설현장을 기습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으로 공사저지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주민들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은 4대강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연합뉴스](2010-07-28)

05 주물단지 조성 반발 확산 당진 면천면 주민투쟁위 예산군청·도청 잇단 방문



의 주물조합이 지난해 11월 예산군과 체결한 입주투자협약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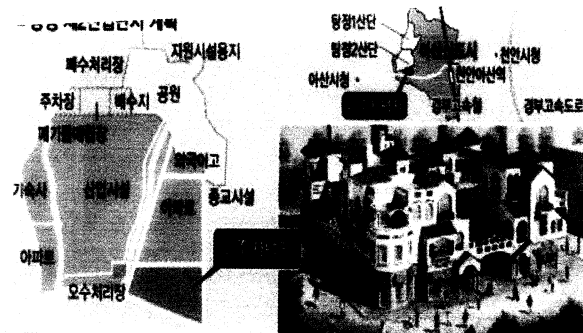
당진군 면천면 주물단지조성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난 1일 충청도청과 예산군청을 방문, 예산군 고덕면에 들어설 예정인 주물단지 조성 결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투쟁위는 이날 그 동안 당진군 주민 2900여명에게 받은 반대서명진정서를 구본충 충남도행정부지사와 최승우 예산군수에게 각각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문제의 주물단지는 경인주물공단 사업협동조합, 광희주물제작소, 극동주공, 대광주공 등 23개 업체

[대전일보](2010-09-03), 14면

06 입주기업·주민 함께 명품마을 만든다

충남 아산 탕정면 명암리 '블루 크리스탈'은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보상·이주 반발과 달리 기업과 주민이 껴앉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양쪽이 애초부터 상생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3월 이곳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요청이 있자 원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반대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상생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주민들의 협조에 삼성은 이주정착 마을 조성으로 화답했다.



[서울신문](2010-09-25)

07 충남 농민회, 18일 오전 "쌀값 보장하라"며 100배(拜) 농성



충남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은 쌀값 보장과 태풍 '곤파스' 피해 추가보상 등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100배(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어 100번 절을 하며 쌀값 보장과 대북 쌀지원 재개, 충남도 쌀 직불금 즉각 시행, 벼 백수피해 농가 실질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100배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디트뉴스](2010-10-18)

08 금산 우라늄광 정부 첫 조사에 식발 등 반발



개발업자의 불인가 결정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 광산 개발과 관련, 정부가 첫 현지 조사에 나섰으나 군의원들이 식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5명은 27일 오전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를 찾아 현지 조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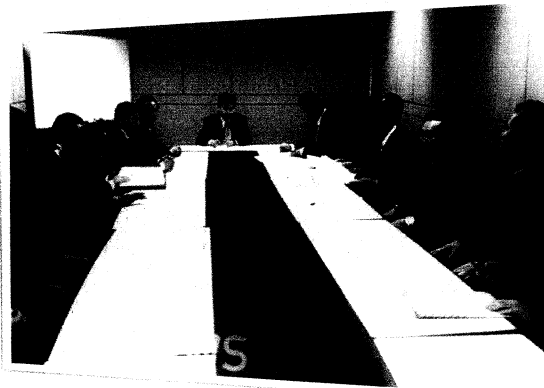
이들은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해 충남도의 불인가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즈음 열릴 지정부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심판 시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기군의회 김봉만 의장 등 군의원 8명은 이날 우라늄 광산 개발로 공사가 중단된 모 사찰 터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식발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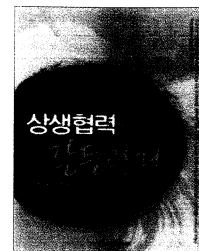
[중도일보](2010-10-27)

09 "연말까지 천안·아산 택시영업권 분쟁 결판"

천안시와 아산시가 KTX천안아산역 택시 사업구역 조정을 올해 안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다.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부터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협의점을 도출했다. 한편, 천안시는 KTX천안아산역을 택시사업 공동 구역으로 지정한 뒤 행정구역 통합 시 전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아산시는 현행 사업구역을 유지하되 부득이 통합이 필요하다면 전체 통합을 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참여한 영업권 분쟁을 겪고 있다.



[디트뉴스](201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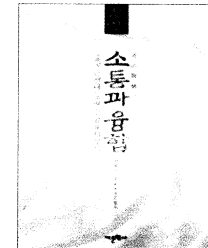


상생협력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 쟁점과 대안

도서명 :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 쟁점과 대안
저 자 : 오열근, 최한규, 권경득 편저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발간일 : 2009-02-13
형 식 : 365쪽 / B5
ISBN-10 : 895341265X
ISBN-13 : 9788953412651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은 시대적 요청이며 정부의 의무가 되었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공공정책이 원활히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이 요구되는 새로운 상생의 시대가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천안·아산·연기·예산군 충남북부 4개 시·군이 상생협력과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정책포럼이 발족되었다. 이 책은 그간의 포럼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을 논문으로 엮은 것이다. 포럼은 지역 현안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전문가 의견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와 해결방향을 가지고, 또 공공분야 갈등이론과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관리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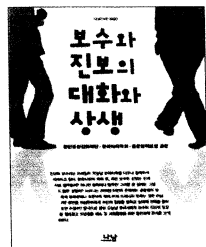
소통과 융합

소통과 융합

도서명 : 소통과 융합
저 자 : 주영신 / 역 자 : 최영준
출판사 : 어문학사
발간일 : 2009-12-28
형 식 : 464쪽 / A5
ISBN-10 : 8961840843
ISBN-13 : 9788961840842

『소통과 융합』은 고대, 근현대, 당대의 중국교육사상사, 중국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담론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총체적으로 망라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교장, 교사 등은 물론,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교육이상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교육제도, 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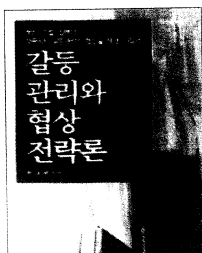
book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도서명 :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미래학회, 좋은정책포럼
출판사 : 나남
발행일 : 2010-07-05
형 식 : 338쪽 / A5
ISBN-10 : 8930084931
ISBN-13 : 9788930084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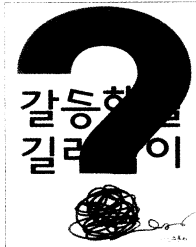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미래학회, 좋은정책포럼이 개최한 '한국의 이념논쟁'을 엮은 책으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이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보수와 진보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경제발전과 분배, 세계화와 북한문제, 미래를 살펴본다. 또한 복지, 노동, 지역과 교육, 통일, 국제관계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서로 다른 시각을 조망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존중해 상생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갈등관리와 협상전략론

도서명 : 갈등관리와 협상전략론
저 자 : 천대운
출판사 : 선학사
발간일 : 2010-08-20
형 식 : 420쪽 / A5
ISBN-10 : 8980721811
ISBN-13 : 978898072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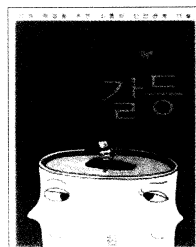
가정, 학교, 회사, 공공기관, 지역사회, 국제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 집단, 조직, 국가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이들을 위해 저술되어졌으며 산업사회의 갈등관리전략을 정보사회에 유용한 전략으로 전환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갈등해결 길라잡이 - 갈등은 상생을 위한 에너지다

도서명 : 갈등해결 길라잡이 - 갈등은 상생을 위한 에너지다
저 자 : 박태순
출판사 : 해피스토리
발행일 : 2010-09-24
형 식 : 279쪽 / A5
ISBN-10 : 899322529X
ISBN-13 : 9788993225297

갈등을 상생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라.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과 신뢰형성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인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태순의 『갈등해결 길라잡이』. 우리는 날마다 혼란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로 상대와 대립하고 충돌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갈등이 생겨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책은 불안 방폐장, 시화 방조제, 그리고 한탄강 댐건설 등 우리 사회의 갈등현장을 다니면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다. 갈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평화적이고 건설적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일상 중에 적용하거나 응용하도록 인도한다.



굿바이 갈등 -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의 인간관계 기술

도서명 : 굿바이 갈등(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의 인간관계 기술)
저 자 : 양광모
출판사 : 청년정신
발간일 : 2010-10-30
형 식 : 224쪽 / A5
ISBN-10 : 8958611154
ISBN-13 : 9788958611158

『굿바이 갈등』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치게 되는 수많은 타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친구간의 갈등, 고객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 부하직원과의 갈등, 모임이나 단체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실제적인 이론과 방법을 알려준다.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